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혁신적 분야로의 자금 배분을 목표로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함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대책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 방안을 밝힘
 -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주의 담보능력 이외에 상환능력도 감안하여 기업대출 리스크를 평가할 계획임

- 본고는 이와 같은 자본규제 개편이 보험회사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최근 개편안과 유사한 2012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위험계수 상향 조정의 영향과 비교·분석함

- 2012년도 조정안의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단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정책발표 이후 약 1년간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함
 - 당시 주택가격은 정체된 상태였으나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던 점이 정책효과가 단기에 그쳤던 원인 중 하나로 보임
 - 2013년 2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초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을 상승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대출관련 보험권 자본규제 개편안이 보험회사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여력이 약화되어 있기에 향후 고위험 대출 신규취급 감소 및 리스크관리 강화가 예상됨
 -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은 자본규제 이외의 시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IFRS 9에 의한 대출공급 감소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1. 분석배경



-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함¹⁾
 -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제어하며,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 원 내외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책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 방안을 밝힘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담보 인정비율(LTV) 60% 초과, 만기 시 원금상환 10% 미만)의 위험계수를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를 4.5%에서 6.0%로 상향 조정함
 - 연체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계수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 당국은 이러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4%p 소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함
- 아울러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주의 담보능력 이외에 상환능력도 감안하여 기업대출 리스크를 평가할 계획임
 - 현행 보험회사 기업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 경감은 LTV 50% 이하 부문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음
 - 즉, 기업대출 위험계수는 LTV 50% 이하 부문에 대해서는 6%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9%를 반영함
 - 향후에는 LTV 비율과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DSCR)도 감안하여 DSCR이 1.4를 초과할 경우 위험계수를 4.5%로 추가적으로 하향 적용하며, 신용위험을 경감하는 LTV 부문도 현행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함
 -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은 원리금 상환에 이용될 수 있는 현금흐름을 해당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누어 구함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 22),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 본고는 이와 같은 자본규제 개편이 보험회사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최근 개편안과 유사한 2012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위험계수 상향 조정의 영향과 비교하여 분석함

2. 2012년 대출관련 자본규제 개편의 영향



■ 금융당국은 2012년에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가계 신용대출의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였음²⁾

- 2011년 6월 말 은행권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안³⁾ 발표 이후 은행권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세가 확대되는 풍선효과 발생
-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2012년 2월 말 발표함
 - 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4%에서 2.8%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일시상환·거치식, 다중채무자)은 1.4%에서 4.0%로 상향 조정
 - 또한,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함
 - * 정상: 0.75% → 1.0%, 요주의: 5% → 10%, 회수의문: 50% → 55%

■ 이러한 보험업권에 대한 가계대출 대응방안은 위험계수의 상향 조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방안과 유사함

- 다른 점은 2012년의 경우 제1금융권에 대한 대책 발표 후 8개월 후에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최근의 대책은 모든 금융권에 대해 동시에 유사한 규제를 적용한 것임
- 또한, 2012년 대응책에는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름

■ 2012년의 대응책 발표 이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총액의 증가율은 둔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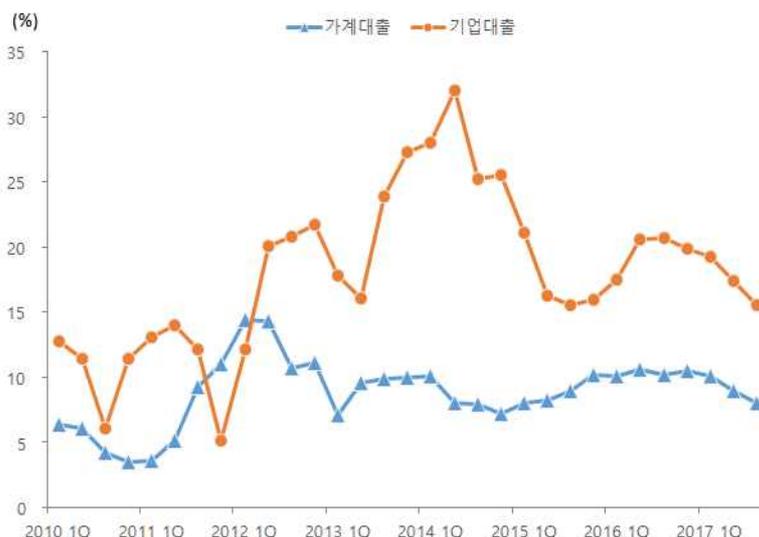
-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책발표 이후 상당기간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2. 2. 27),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1. 6. 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 2012년 1/4분기 14.4%에서 2013년 1/4분기 7.1%까지 하락함
- 반면,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2년 1/4분기 이후 급증함
 -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PF대출이 급증했던 것이 기업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임

〈그림 1〉 보험회사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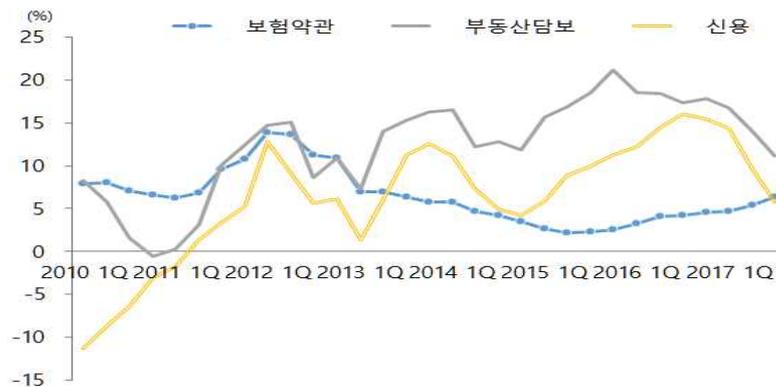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그러나 가계대출을 부분별로 살펴볼 때, 정책에 의한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단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정책발표 이후 약 1년간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함
- 반면, 보험약관대출은 2015년도까지 증가율이 둔화되어 보험회사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둔화에 기여함
 - 보험계약대출은 신용위험계수가 0%임에도 불구하고 둔화되었는데, 이는 보험계약대출의 기준 금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이율⁴⁾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하락기에 경쟁력이 떨어져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4) 보험회사는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이 높아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율(부리이율)이 금리하락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 보험회사 주요 가계대출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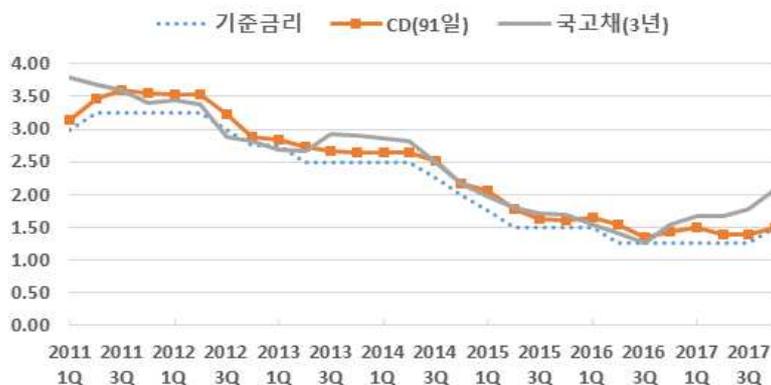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당시 주택가격은 정체된 상태였으나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던 점이 정책효과가 단기에 그쳤던 원인 중 하나로 보임

- 주택가격지수⁵⁾는 2011년 1월 89.0에서 2012년 2월 94.3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년 동안 92.3~94.4의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동함
- CD금리(91일)는 2012년 1/4분기 3.54%에서 2014년 1/4분기 2.87%까지 하락하여 대출수요가 억제되기 어려웠음

〈그림 3〉 금리 추이



주: 분기별 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5) 2007년 11월 100 기준임;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을 상승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1일에 발표한 종합대책⁶⁾에서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및 공공분양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밝힘
 - 이전 정부의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를 탈피하고, 수요창출-공급억제로 방향을 전환함
- 이후 2014년 7월⁷⁾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이하 DTI)을 완화하고 9월⁸⁾에는 재건축연한 및 청약 1순위 자격을 완화하는 등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통한 주택매입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였음

3. 최근 자본규제 강화의 영향



■ 가계대출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억제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는 규제 개편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 것으로 보임

- 2012년에는 고위험 가계대출은 물론 일반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번 규제 개편 방안은 ‘생산적 자금흐름을 부드럽게 유도’하려는 금융당국의 의도임
- 금리추세, 부동산정책 기조, 보험회사의 자본여력 등에서 2012년과 2018년은 상이하며, 대출수요 및 보험회사의 대출공급여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전 금융업권에 유사한 개편 방안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한 것도 2012년과 다른 점

■ 보험회사의 경우 실질적인 자본여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자본규제 강화로 인해 향후 고위험 대출 신규취급 감소 및 리스크관리 강화가 예상됨

- 대다수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규제(RBC)의 강화 및 향후 도입 예정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및 요구자본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임

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 4. 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7)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 7. 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 9. 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

- 그러나 보험회사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감소는 이번 자본규제보다는 향후 금리 변화와 부동산가격 등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2012년의 경우 안정적 부동산가격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에 의해 자본규제 강화에 의한 대출 억제 효과가 단기에 그쳤음
 - 정책적 요인 이외에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으로는 저금리 기조, 은행의 대출전략, 부동산가격 상승 등이 있음⁹⁾

-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의한 국내 금리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억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과거 금리 인상 초기에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경기가 둔화될 때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¹⁰⁾
 - 가계부채 역시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단, 만약 투기수요를 강하게 억제하고자 하는 부동산정책 기조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하락 혹은 안정된다면, 가계대출이 좀 더 이른 시점에 감소할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은 상환능력이 우수한 차주를 대상으로 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우수한 차주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음
 - 2012년의 경우 기업대출을 유인하는 정책은 없었지만,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PF대출 및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최근의 자본규제 개편안이 보험회사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9) 박창균(2016),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대응」, 『부동산 포커스』

10) 김천구(2017), 「국내 금리 인상기의 경험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다만,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여력이 약화되어 있기에 향후 고위험 대출 신규취급 감소 및 리스크관리 강화가 예상됨
-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은 자본규제 이외의 시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국내 금리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억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자본규제 개편으로 보험회사가 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대출 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이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음
-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IFRS 9에 의한 대출공급 감소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IFRS 9 적용 시 금리상승기에 대손충당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량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대출공급이 감소할 수 있음
 - 또한, 기업회계상의 자본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음 **kiri**